

이번호 둘러보기

- 1 인사말
- 2 이름뿐인 녹색성장
- 4 원전 후보지 선정 갈등
- 6 [단체소개]
기후변화에너지대안
센터
- 7 [날씨 이야기]
온난화와 한반도 한파

동아시아 기후네트워크

사무국: 광주환경운동연합
Kwangju@kfem.or.kr

편집 : 이지언

번역 :
 (한중) 金龙军, 于金卉, 吴东建
 (한일) 石井晋平, 葛西
 麻衣子, 原田静香, 全美惠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새해 초부터 우리 동북아시아에 엇비슷하게 ‘기록적인 한파’와 ‘눈 폭탄’이 이어지고 있다. 동북아뿐만 아니라 지구촌 북반구 이곳 저곳에서 겨울철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했다. 남반구의 호주와 브라질 그리고 아프리카 등에서는 기록적인 홍수와 ‘물 폭탄’을 경험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을 기상학자들은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가 그 요인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다.

이 같은 기상이변은 우리 인류가 적절한 대응책을 화급하게 강구하지 않으면 반복되고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해 연말, 우리는 멕시코의 칸쿤에서 개최되었던 16차 유엔 기후변화 총회(COP16)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책을 기대했었다. COP16이 만족스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기후변화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지만은 확인한 만큼 앞으로 꾸준한 노력을 경주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연초 지구촌 기상이변, 지난해 말 COP16 등은 우리 ‘동아시아 기후네트워크(이하 기후네트워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시사해주고 있다. 올해는 우리 한중일 환경NGO들이 기후네트워크를 발족시킨 이후 첫해다. 과거에 없었던 동아시아 네트워크 운동이 출항하는 해이기도 하다. 먼 길을 향해해야 하는 만큼,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각 NGO들이 내실 있는 기후행동 프로그램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풀뿌리 시민참여의 기후보호 운동이 활성화된다면 네트워크 운동도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것이다. 또 우리 한중일의 기후네트워크는 각국의 일상적인 기후운동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교환할 것이다. 이는 네트워크 운동의 발판이다. 이로부터 다양한 활동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화석에너지와 핵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줄여나가는 저탄소의 사회로의 전환, 재생가능에너지만으로도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저탄소 미래를 꿈꾸며 만들어가자는 것이 우리 네트워크의 활동 방향이다. 올해가 우리 네트워크 활동 첫해인 만큼, 연초에 공동의 기후행동 슬로건을 정하고 한중일 시민들에게 네트워크의 존재와 활동소식을 전하는 이벤트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한 걸음 두 걸음씩 서서히 전진해 나아갔으면 한다. 새해 동아시아 기후네트워크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한중일 NGO 성원들 모두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기후운동을 전개하기를 기원한다.

2011. 2

한국대표 광주환경운동연합 임낙평
 일본대표 동아시아환경정보발전소 히로세 도시야
 중국대표 환우(環友)과학기술환경센터 리리

임낙평

廣瀬花

李力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이름뿐인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수요전망, 전력, 가스 등 주요정책 한꺼번에 공청회 진행

지난해 12월, 한국정부는 에너지정책에 대한 3가지 공청회를 한꺼번에 진행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의 비난을 샀다. 국가에너지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인 '에너지 수요전망', '전력수급기본계획', '천연가스수급기본계획' 등 공청회를 형식적으로 한꺼번에 진행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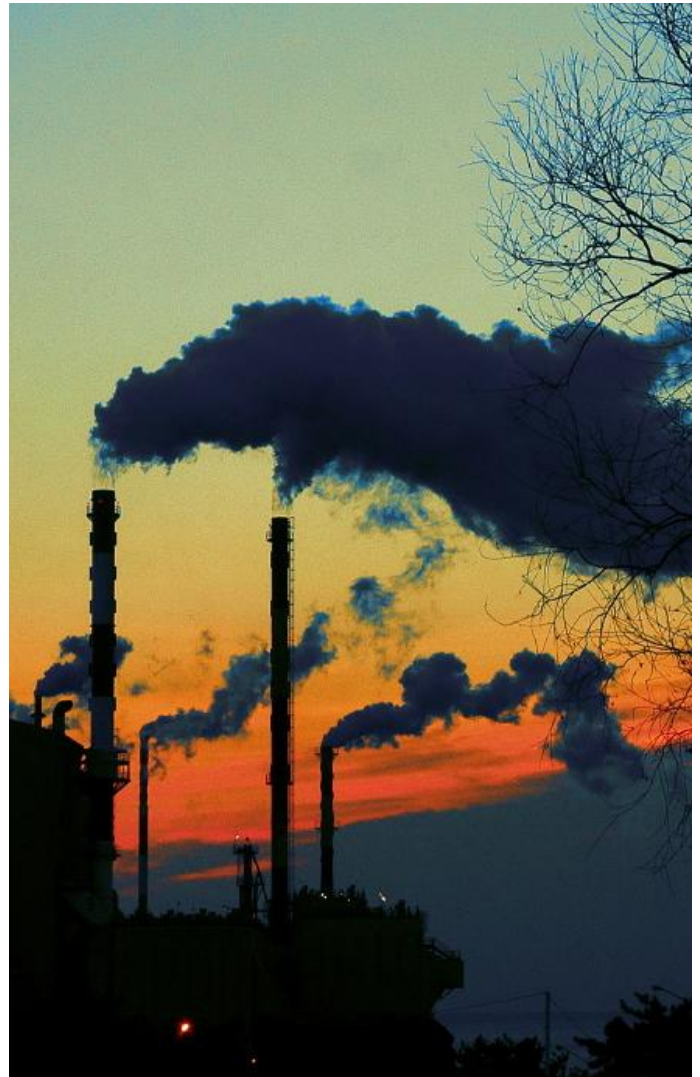
특히 이들 정책은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산업계, 지역주민, 소비자단체, 학계, 지자체, 노동조합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어 각각의 공청회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공청회 때마다 논쟁이 되고 있어 다양한 토론과 토의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이번 공청회는 이러한 과정이 미흡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지난 2008년 진행된 '에너지수요전망' 관련 토론의 경우 수 차례 진행된 사전토론을 통해 다양한 논점이 제시된 가운데 공청회가 열렸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공청회는 날치기로 진행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더욱이 한국정부는 이들 정책을 12월말까지 발표해야 한다는 매우 형식적인 이유를 들어 이들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명박 정부는 그간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보다 계획추진에 더욱 관심이 있음을 더욱 방증하게 됐다.

2년만에 무려 13.4%나 증가된 에너지 수요 전망

공청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한국정부가 예상한 에너지수요전망이 불과 2년 만에 무려 13.4%나 늘어났다는 점이다. 2008년 정부는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 에너지 수요증가분(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0%로 잡았다. 즉, 향후 온실가스 배출 수요 증가를 예측한 후 그 증가대비 30%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미지 제공=고수경/에너지관리공단

그러나 이렇게 상대적인 값을 목표로 잡을 경우 향후 에너지 사용증가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들쭉날쭉하여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지기 힘들다. 특히 에너지 수요전망을 부풀려 잡을 경우, 계산상으론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는 아이러니도 생길 수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2030년 에너지수요전망을 388.9 백만 TOE로 발표했다. 결국 환경단체들의 그간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게 된 셈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2008년 정부가 예측했던 342.8 백만TOE에 비해 13.4%나 증가한 수치다. 재미있는 점은 2008년 예측에 비해 2010년 전망에 사용된 GDP증가율은 낮아지고 국제유가는 더욱 높아졌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GDP 증가가 둔화되고 국제유가가 높아지면, 에너지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정상이지만 정부는 정반대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한국1인당 에너지소비량은 2008년 4.95 TOE/인에서 2030년 8.0 TOE/인으로 무려 61.6%나 증가하게 된다. 한국 국민은 향후 20년 동안 에너지를 지금보다 0.6배나 많이 쓸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엉터리 예측의 배경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정부의 정책이 숨어있다. 에너지소비량을 부풀려 놓으면 정부가 스스로 정한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맞추기가 쉽고, 실제 온실가스 감축을 하지 않으면서도 감축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석탄은 유지, LNG는 반토막. 그 틈새를 노린 핵 발전



지난해 12월 7일 한국전력공사에서 진행한 국가 에너지, 전력수급, 천연가스수급 계획 공청회 규탄 기자회견. 이미지=에너지정의행동

전력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봐도 많은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언급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2011년 196,332GWh에서 2024년 188,411GWh로 거의 변함이 없는 반면,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LNG화력발전의 경우 2011년 98,038GWh에서 2024년 59,201GWh로 절대량이 39.6% 축소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온실가스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LNG의 사용은 줄인 채,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의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는 안을 내놓고 있다. 더욱이 핵폐기물과 안정성 논란에 휩싸인 핵발전의 비중을 2011년 32.7%에서 2024년 48.5%, 2030년 59%로 늘리겠다는 것이 현재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정책이다. 그야말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허상인 셈이다.

말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재론 "고탄소 회색성장" 이명박 정부는 그간 국내외에 자신의 에너지정책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선전해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함께 늘어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환경적 문제를 안고 있는 핵발전소의 비중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 여기에 현 정부가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이라 꼽으며 핵발전소의 수출까지 추진하고 있다. 상황이 이쯤 되자 각계에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고탄소 회색성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꺼번에 열린 3개의 공청회는 저탄소와 녹색성장에 대한 정부생각이 어떤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예다. '녹색성장'이 더 많은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배출, 더 많은 핵발전소건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짜 녹색'을 찾기 위한 한국의 시민사회활동이 필요한 이유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http://eco-center.org/>

대한민국, 핵의 도마 위에 오르다

원전 후보지 선정에 지역갈등 재점화... 곳곳 반핵운동 전개



지난해 12월 10일 해남관내 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핵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며 '핵발전소 건설저지 해남군민연합'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미지=광주환경운동연합

지난해 11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신규 핵발전소 후보지로 전남 고흥과 해남, 경북 영덕, 강원 삼척을 후보지로 선정하고, 이들 지자체 가운데 유치신청을 받아 최종 2곳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과거 핵발전소 부지로 선정되거나 핵 폐기장 부지선정에 맞서 반대운동을 펼쳤던 곳으로 이번 한수원의 결정에 강한 분노감을 표출하고 있다.

해남과 고흥 '원전 후보지' 선정에 지역민 "발끈"

한반도의 땅끝 전남 해남이 원전후보지로 선정됐다는 보도에 지역민은 일제히 '발끈'했다. 해남은 이미 2차례나 원전후보지로 선정됐다가 지역민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부지선정이 취소됐던 곳으로 이번 한수원의 발표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해남관내 3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핵발전소저지 해남군민연합'(이하 해남군민연합) 창립총회를 갖고 핵발전소 반대운동을 본격화했다. '해남군민연합'은 진도, 완도 등 인근지역과 연대를 강화하고, 읍면단위 지부조직을 구성함으로써 체계적인 반핵활동을 전개했다.

아울러 '1만인 해남지킴이'를 통한 조직 강화와

'1만인 서명운동'을 통한 반핵 홍보전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여론을 이끌었다. 결국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해남군의회는 지난달 19일 원전유치 반대의사를 공식화했고, 해남군은 지역의 반핵여론과 의회의 결정에 따라 원전을 유치하지 않기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청정해역 고흥은 '고흥민주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난해 12월 21일 '핵발전소저지고흥대책위원회'를 발족, 지역의 반핵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또 이보다 앞서 같은 달 3일에는 158명의 발기인이 참여하는 발기인대회가 열렸으며, 이날 발기선언문을 통해 핵발전소 건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역여론을 수렴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던 고흥군의회는 결국 7일 성명을 내고 "고흥의 장기적인 미래와 청정 이미지를 지키고 가꾸는 것이 더 값지고 소중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원전유치 반대를 공식화했다. 고흥군은 이로써 1982년 핵발전소 건설예정지로 선정됐지만, 군민들의 강한 반대로 1998년 핵발전소 부지해제를 이끈 이후 또 다시 원전건설이 무산된 지역이 되었다.

삼척·영덕, 계속된 원전유치선정에 지역민 '몸살'

강원 삼척의 '핵발전소유치 백지화투쟁위원회'(이하 원전유치백지화위원회)도 지난해 12월 20일 사무실을 개소하고 전국의 반핵단체와 연대를 통해 핵의 위험성과 핵발전소 건립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등 반대활동을 본격화했다. 특히 천주교 원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도 이날 개소식에 참석, 삼척시의 핵발전소 및 핵 연구단지 유치계획에 반대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삼척시의의회는 지난달 14일 삼척시가 제출한 '원자력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원자력발전소 유치동의안'을 상정, 전원 찬성으로 가결함에 따라 삼척시의 핵발전소 건립문제는 주민투표에 부쳐지게 됐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석회암 지대인 삼척시가 원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삼척시의회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원전유치백지화위원회’는 주민투표 계획이 확정되기 전부터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갖가지 탈·불법이 관내에 자행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현재 삼척시에 핵발전소 유치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한 상태다.

경북 영덕의 반핵운동은 조금 특별하다. 한국 최초로 핵폐기장 반대운동이 일었던 곳이기 때문이다. 핵폐기물의 축적으로 인해 정부는 1986년 핵폐기장 부지선정에 착수했고, 당시 가장 유력한 지역으로 영덕이 손꼽혔다.

그러나 지역민의 반대는 격렬했고 연일 반대시위가 이어졌다. 결국 1989년 3월 정부는 부지조사활동을 전면 중단하기에 이른다. 2003년 핵폐기장 후보지로 또 다시 선정된 영덕은 2년 후인 2005년에는 경주, 군산, 포항과 함께 방폐장 건립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하기에 이른다. 당시 영덕 관내 2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핵폐기장설치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읍면별 반핵 홍보전을 펼치며 연일 집회를 이어갔고, 지역의 반핵여론을 이끌었다. 결국 핵 시설물은 영덕에 들어올 수 없었다.

영덕군의회는 지난해 말 ‘신규원전건설부지 유치동의안’을 의결하여 통과시켰으며, 영덕군은 원전유치 신청서를 한수원에 최종 제출했다. 그러나 지자체의 이러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영덕이 그간 보여준 반핵여론이 바닥 민심을 통해 서서히 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편 원전10기가 현재 가동 및 건설예정인 경북 울진군에서 최근 핵발전소 유치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울진 내 반핵여론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울진지역 시민사회단체연합은 지난달 31일 성명을 발표,

주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원전유치를 신청하는 것은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원전유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한수원에 구걸하다시피 핵발전소 유치를 신청하는 것으로 명분도 실리도 없는 군정”이라며 “생태문화 관광도시 울진을 만드는 데 매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역반발 점증... 정부의 전향적 태도 절실

1980년대 이후 25년여 간 지속된 핵 시설물 설치에 따른 군·민간 갈등과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핵 문제로 지역은 몸살을 앓아왔고, 찬반으로 나뉜 핵 문제는 지역갈등으로까지 비화되면서 지역민의 피로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최근 경북 경주시 방폐장에 핵 방폐물이 처음으로 반입됐으나, ‘경주핵안전연대’ 등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에서 방폐물 반입금지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경주시의회까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방폐물 반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2008년 정부는 핵에너지 중심의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확정한 뒤 2030년까지 현재의 36%인 핵발전 용량을 58%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정책에 따르면 현재 가동 중인 20기와 건설 중인 8기를 포함해 앞으로 10여기 이상의 핵발전소가 추가로 건립될 계획이다.

정부는 에너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법은 제시하지 못한 채 핵발전소만을 고집함으로써 후손들에게 엄청난 재앙과 위험을 떠넘기고 있다. 정부가 지금의 핵에너지 정책을 고수하는 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 간 갈등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핵 시설물에 대한 지역민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정부는 인지해야 할 것이다.

정찬대 광주환경운동연합 수습간사
<http://kwangju.kfem.or.kr>



시민햇빛발전소 건립으로 시민실천의 에너지 대안을 찾다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대안을 찾는 전문기관으로 부산에는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약칭, 기후에너지센터)의 활약이 주목되고 있다.

4년째의 활동에 접어든 기후에너지센터는 기후에너지 문제에 대한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 실현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시민이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대안으로 시민햇빛발전소를 3곳에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시민이 낸 자본금으로 건립한 시민햇빛발전소 중 특히 1호기는 부산에서는 민주화의 성지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부산민주공원의 부지내에 건립하여 청소년들이 민주화의 의미와 함께 기후에너지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체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분산형 에너지체제 실현을 위한 시민햇빛발전소에서 나오는 발전차액 또한 학생들로부터 기후에너지문제에 대한 작품을 심의하여 '햇빛장학금'의 형태로 사회에 환원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 3년간 기후에너지센터는 단체결성과 교육강사 조직, 정책적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왔고, 이제 4년째에 접어드는 올해에는 명실공히 기후에너지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다져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지도자 양성, 생태문화 해설사 과정 개설,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정책활동 기능 강화 등 사업의 외연을 더욱 확대하고 질적으로 심화해 나갈 예정이다. 물론 동아시아 기후네트워크와 관련하여서도 한국의 영남권 지역에서의 거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려 한다.

기후에너지센터가 각종 사업의 내실을 다져나가는 이와 같은 활동의 종착점은 기후에너지 문제에 대해 시민이 올바른 방향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데 있을 것이다. 시민햇빛발전소의 설치는 물론이고 시민 주민의 실천운동으로서의 기후에너지운동에 온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본다. 태양으로 가는 길을 향하여...

노승조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정책실장

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웹사이트
<http://sunway.or.kr>

지구온난화, 한반도를 끽끔 얼리다 기록적 한파에 시민들 발만 동동(冬冬)



북극이 아니라 한국이다. 강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해 12월 29일 강원도 화천군 화천천의 모습. 이미지=연합뉴스

최근 기록적인 한파가 연일 계속되면서 한반도가 끽끔 얼어붙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17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17.8도를 기록했으며, 부산의 경우 -12.8도까지 떨어지면서 1915년 이래 96년 만에 가장 추운 날로 기록됐다.

올 들어 서울의 평균기온은 -6.2도로 평년보다 4도 가량 낮게 관측됐으며, 지난달 1일부터 16일까지 -10도 이하로 떨어진 날도 15일에 달했다. 사흘에 하루 꼴로 -10도 이하의 맹 추위가 기승을 부린 셈이다. 또한 강한 시베리아 고기압이 한반도에 확장되면서 전국적으로 폭설이 내리기도 했다.

기상청은 이번 한파의 원인을 극지방의 찬 공기가 동아시아로 내려온 가운데 시베리아 고기압의 발달로 북극의 찬 공기가 한반도로 밀려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이 따뜻해지면서 북극의 찬 공기가 한국 등 북위 30~60도의 중위도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기록적인 한파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이는 냉장고 문을 열면 내부온도가 상승하면서 차가운 냉기가 아래쪽으로 흐르는 현상과 같다.

더욱이 시베리아는 물론 몽골 남동부까지 눈으로 덮이면서 대륙고기압은 더욱 강하게 발달하였고, 이 지역의 상층기온이 -40도까지 떨어지면서 한기(寒氣)는 더욱 강력해졌다.

지구온난화로 날씨의 변동 폭이 커지고, 규칙성이 무너지면서 겨울철 강추위가 잦아지고,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는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이다.

기상청관계자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올 겨울 추운 날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삼한사온의 패턴이 이어지고 있지만, 기온 자체가 너무 낮아 따뜻함을 느끼기 어렵다”고 한다.

문석훈 광주지방기상청 기후과

웹사이트 (일본어) <http://web.kma.go.kr/jpn/index.jsp>
웹사이트 (중국어) <http://web.kma.go.kr/chn/index.jsp>